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인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동참해주세요

2025년 제 35호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01

‘막가파식’ 국가대표 지도자 찍어내기… 빙상연맹에 무슨 일이?

한겨레 21 장필수 기자

02

경기 졌다고 제자 폭행…중계에 잡힌 '폭력 코치'

SBS 유병민 기자

03

안전장치 없는 '신뢰'의 그늘…시험대에 올라선 태권도장

이데일이 정현 칼럼리스트

04

"준비 없는 이전 반대"...축구협회, '천안 시대' 앞두고 뒤숭숭

News1 안영준 기자

05

“AI는 스포츠 정책의 선택 아닌 필수”...정부가 민간 자율성 돕는 환경 만들어야

한겨레 김창금 기자

‘막가파식’ 국가대표 지도자 찍어내기… 빙상연맹에 무슨 일이?

한겨레 21 장필수 기자

2025-09-19 13:59

사진=2022년 12월27일 충북 진천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면(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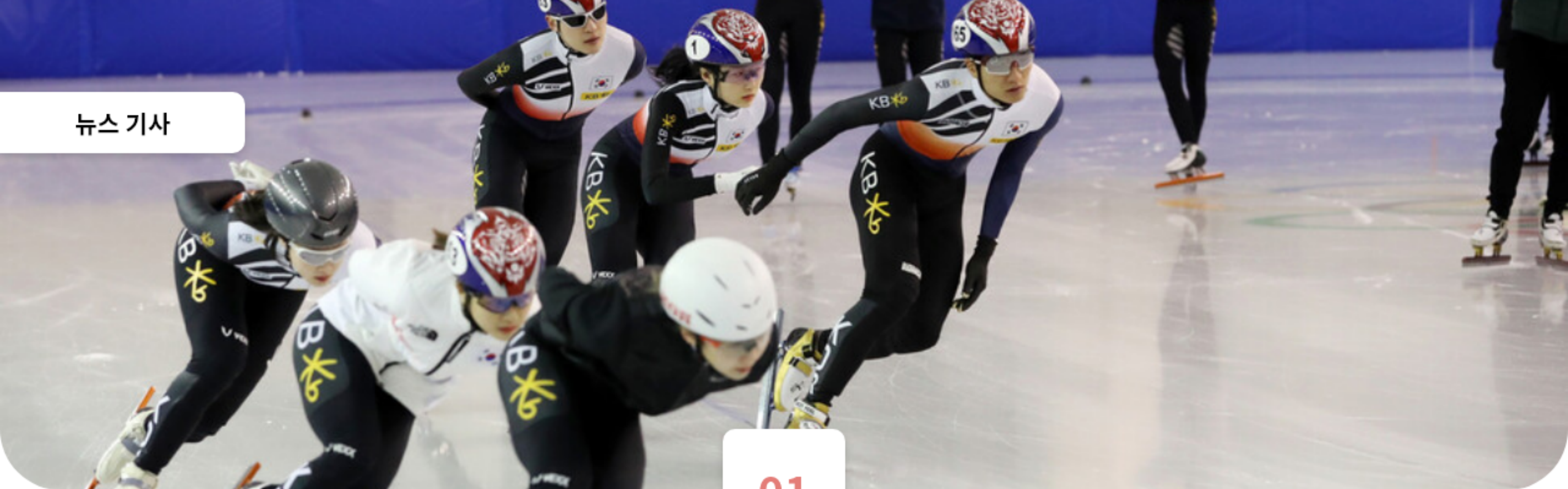
“경기력향상위원회(경향위)에서 계약 해지 사유 발생으로 판단했고요. 계약 해지를 위해 지금 행정 처리 중이고 서면 통지 갈 예정입니다.”

김현곤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는 2025년 6월17일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직원에게 전화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근로계약 기간이 2026년 3월31일까지고, ‘계약 해지’ 사유인 ‘식대 부당 청구’ 사건은 대한체육회의 재심의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체육회의 재심 기간 동안 빙상연맹의 징계(자격정지 3개월)는 ‘효력 정지’ 상태이기에 빙상연맹이 다음 단계인 ‘계약 해지’를 언급할 수 없었다. 김 코치는 이때 “자격정지 3개월은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찍어내겠다는 빙상연맹의 의지”라고 직감했다.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다. 빙상연맹은 5월23일 김 코치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뒤 그를 지도자 업무에서 배제했다.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가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고 복직시켜라’고 경고하고 법원마저 같은 취지의 가처분을 인용했지만, 빙상연맹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한겨레21이 손솔 진보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빙상연맹 내부 자료를 보면, 빙상연맹이 김 코치와 윤재명 국가대표 감독을 찍어내기 위해 무리수를 둔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심지어 두 지도자를 해임할 빌미를 찾으려 현 국가대표 선수들까지 동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수경 체제’ 들어선 뒤 시작된 찍어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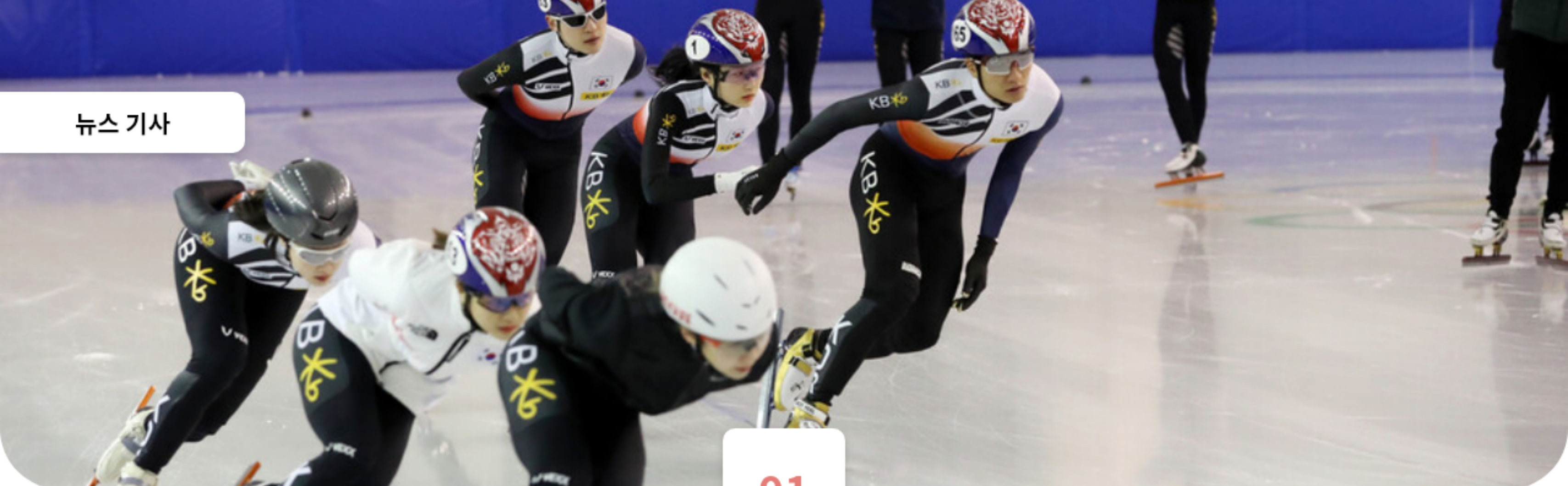
찍어내기는 빙상연맹이 ‘이수경 회장’ 체제로 바뀌면서 시작됐다. 피겨 선수 출신 이수경 삼보모터스그룹 사장은 2025년 2월25일 빙상연맹 회장에 취임한 뒤 새 집행부를 꾸린다. 박세우 한국체육대학 교수가 빙상연맹 부회장 대행 겸 전무이사로 취임했고, 김선태 성남 시청 감독, 제갈성렬 의정부시청 감독 등 경기인 출신이 대거 이사진에 합류한다. 이들은 경향위(위원장 박세우)에도 소속돼 2026년 2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겨울올림픽을 겨냥한 국가대표와 엘리트 선수 훈련 및 지원 전략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01

빙상연맹의 지도자 찍어내기 작전 일지

2024년	12월4~8일	윤재명 국가대표 감독, 김현곤 코치 등과 국가대표 선수단 외식
▼		
2025년	2월22일	전임 집행부, 자체 조사 뒤 경기력향상위원회 추가 논의 의결 김현곤 코치 조사 뒤 직무정지 해제
▼		
	2월25일	이수경 신임 빙상연맹 회장 취임
▼		
	4월22일	새 집행부 경향위 2차 회의, '식대 부당 청구' 사건 재조사 및 스포츠공정위 원회 회부 의결
▼		
	5월23일	스포츠공정위, 윤 감독과 김 코치에게 각각 자격정지 1개월과 3개월 처분 경향위 5차 회의, 새 국가대표 지도자 채용 의결
	5월26일	빙상연맹, 두 지도자에게 국가대표 제외 통보 윤 감독(5월26일)과 김 코치(5월27일), 대한체육회 재심 신청
▼		
	6월9일	경향위 6차 회의, '두 지도자 계약 해지 및 새 지도자 채용' 의결
	6월17일	빙상연맹, 김 코치에게 "계약 해지 서면 통보 예정" 고지
	6월19일	경향위 7차 회의, '성적 부진 및 선수 관리 소홀로 지도자 계약 해지' 의결
▼		
	7월9일	체육회, 연맹에 '징계 효력 정지하라' 1차 공문 발송
	7월11일	법원, 김 코치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7월24일	경향위 10차 회의, '체육회 재심 발표 전까지 지도자 훈련에서 제외' 의결
	7월29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 코치에게 "억울함 없어야 한다"
	7월31일	체육회, 연맹에 '징계 효력 정지하라' 2차 공문 발송
▼		
	8월13일	윤 감독, 체육회 재심의에서 '무혐의' 판정
	8월19일	빙상연맹 쇼트트랙 TF, 김선태 이사 등 4명 새 감독으로 추천 경향위, 김 이사를 새 감독으로 확정해 이사회 통보
	8월20일	빙상연맹 이사회, 새 감독으로 김 이사 의결
	8월21일	빙상연맹, 공식 보도자료로 '윤 감독 보직 변경, 김 코치 해임, 김선태 임시 총감독 임명' 발표



01

새 집행부의 경향위는 꾸러지자마자 윤 감독과 김 코치의 ‘식대 부당 청구’ 사건을 재검토한다. 이 사건은 쇼트트랙 지도자와 선수들이 2024년 12월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대회 도중 외부에서 네 차례 식사하고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밥값을 결제한 윤 감독에게서 영수증을 건네받은 김 코치가 빙상연맹에 비용을 청구해 약 73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두고 ‘착복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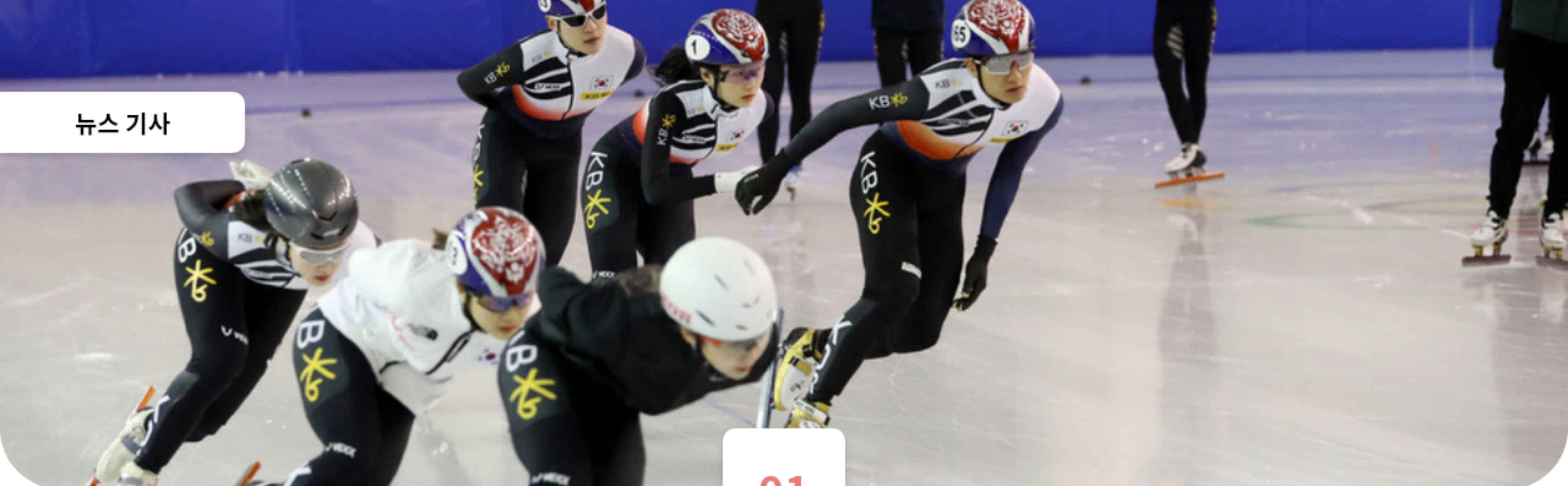
2025년 초 전임 집행부는 윤 감독의 신고로 조사에 나섰다. 2월22일 열린 조사는 김 코치가 ‘감독 지시 없이 임의로 비용을 청구해 착복할 의지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췄는데, 조사관은 “김 코치가 임의로 착복했다는 의심이 있다”는 전제가 변경됐다”고 결론냈다. 윤 감독이 조사 전 김 코치의 청구 내역을 집행하겠다고 취지로 말한 빙상연맹 직원에게 “알겠습니다”라고 했고, 김 코치는 ‘내가 받을 돈이 아니니 연맹 판단에 따라 돌려주겠다’고 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집행부의 경향위는 4월22일 2차 회의에서 이 사건을 스포츠공정위원회(스포츠 공정위)에 회부하고 재조사하기로 의결한다. 이후 스포츠공정위는 5월23일 “김 코치가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내역을 부당하게 청구했고, 윤 감독은 이를 빙상연맹에 알리지 않았다”며 각각 자격정지 1개월(윤재명), 3개월(김현곤) 처분을 내린다. 김 코치가 재조사에서 ‘현지 식사가 부실해 감독이 외부 식사를 제안했고, 대표팀 식대는 공적인 지출이라 판단했다. 그 뒤 연맹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돈이 입금된지도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계 결정 전에 마련된 새 감독 채용 공고

이 징계를 기점으로 빙상연맹은 전광석화처럼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에도 내부적으로 지도자 채용 공고까지 마련해놓는 등 ‘계약 해지’를 준비했다.

경향위는 5월23일 스포츠공정위의 징계 결과가 나온 뒤 곧바로 5차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했다. 이때 경향위 위원들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지도자 채용 계획의 건’을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고 ‘새 국가대표 감독 및 지도자 채용 공고안’도 함께 살펴봤다. 규정상 독립적으로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스포츠공정위의 결과(징계)를 예상하고 공고안을 미리 짜뒀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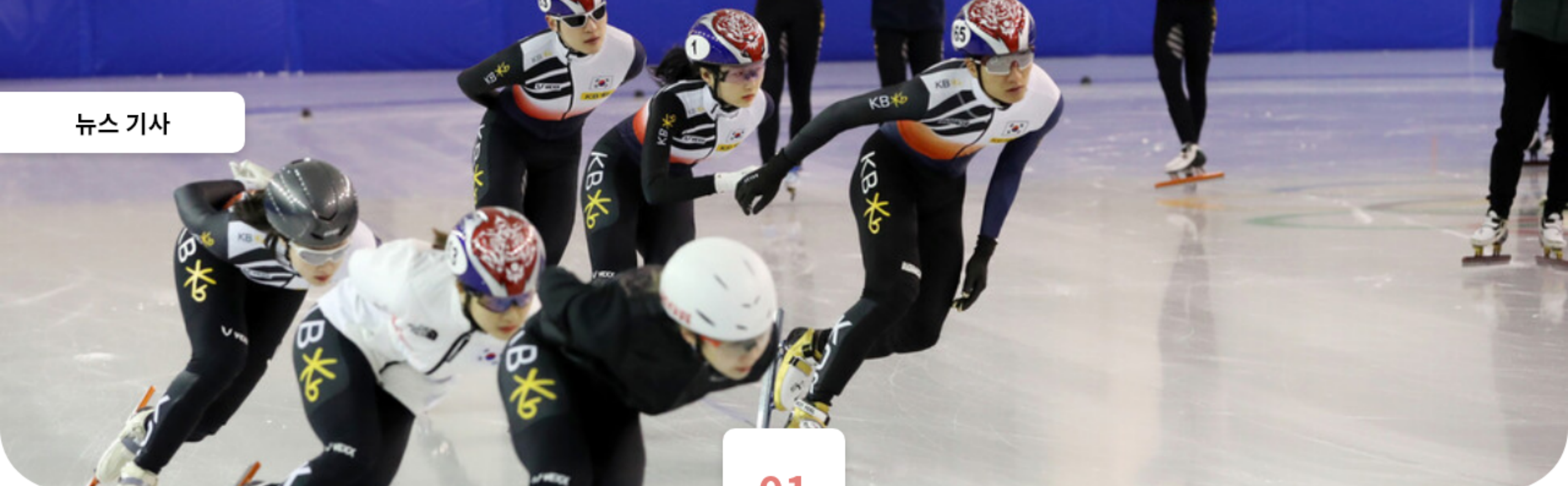
2026년 2월 겨울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조처는 이례적이었다. 빙상연맹 사정을 잘 아는 김씨는 “서면부의는 긴급하지만 경미한 사안을 처리하는 방식이어서, 국가대표 지도자 채용 같은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서면부의를 할 수 없다. 최소한 영상회의라도 해야 한다”며 “스포츠공정위에서 (징계가) 정해질 것을 빙상연맹이 알았다고 짐작할 수밖에 없다. 경향위 위원들이 다들 (지도자 채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에 불복한 두 지도자는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한다. 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하면 빙상연맹의 징계 효력이 일시 정지되기 때문이다. 김 코치는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체육회는 재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빙상연맹은 6월2일 재심 신청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두 지도자의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입촌을 불허했다. 그러면서 급여는 제때 지급했다. 두 지도자는 “계약서상 해야 할 일(선수촌에서 선수 지도)을 하지 않고 보고서 작성 등 다른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때부터 빙상연맹은 ‘계약 해지’와 ‘신규 채용’을 동시에 밀어붙인다. 경향위는 6차 회의(6월9일)에서 “지도자의 공석은 올림픽 시즌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선수단 관리 및 경기력에 직결될 수 있는 부정적 요인”이라며 “두 지도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새 지도자를 채용하”기로 의결한다. 7차 회의(6월19일)에서는 “성적 부진, 선수 관리 소홀, 훈련프로그램 문제점을 사유로 두 지도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의결”하며 자질 문제를 꺼내든다.

빙상연맹의 의도를 간파한 두 지도자는 체육회를 찾아간다. 사태를 파악한 체육회는 7월9일과 7월31일 두 차례에 걸쳐 빙상연맹에 ‘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효력을 정지하고 징계 혐의자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다. 김나미 체육회 사무총장도 이수경 빙상연맹 회장에게 연락해 우려의 뜻을 전한다.

그사이 김 코치는 7월11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통보까지 받았다. 법원은 빙상연맹의 징계를 놓고 ‘사회 통념을 넘는 가혹한 제재’라며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01

그런데도 바뀌는 게 없었다. 경향위는 10차 회의(7월24일)에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두 지도자를 국가대표 훈련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체육회 직원 ㄴ씨는 “이 사안은 유승민 (체육회) 회장도 보고받았다. 당시 회장은 ‘그런 일이 있었냐’며 놀라워했다”며 “빙상은 다른 종목과 (일 처리 방식이) 너무 달랐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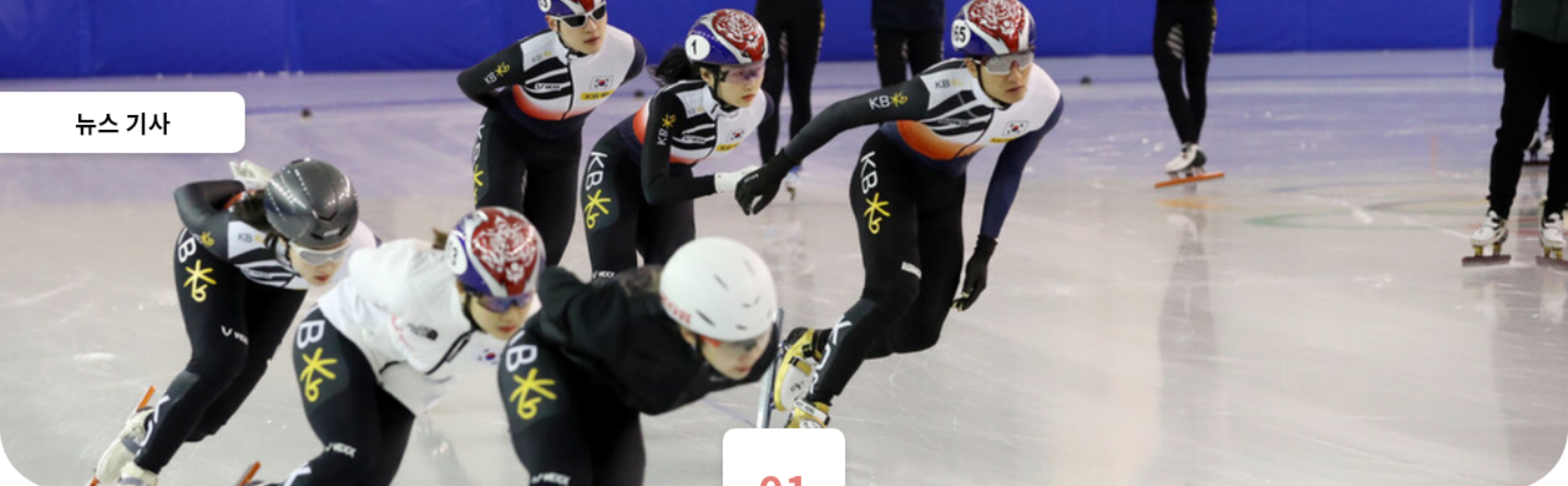
국가대표 선수들까지 동원한 빙상연맹

지도자 공백 문제가 공론화하자, 빙상연맹은 논란을 잠재울 묘수를 찾는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단과의 면담을 통해 지도자 해임 명분을 쌓은 것이다.

경향위는 12차 회의(8월13일)에서 경향위 위원인 이인아 변호사로부터 쇼트트랙 대표팀 면담 결과를 보고받았다. 선수단은 8월6일 진천선수촌에서 이인아 위원을 만나 두 지도자를 놓고 “경기 운영과 전술 등에 관한 유행에 뒤처져 있음”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이 기복이 훈련 내용에도 영향을 미침” 등의 평가를 했다. 이어 지도자 공석 해결 방안을 묻는 말에는 “새로운 지도자를 원함” “어느 쪽이든 확정되기 전까지 총원 필요”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면담 자료를 본 경향위는 12차 회의에서 “다수의 선수가 해당 지도자들의 교체를 원하고 있다”며 “두 지도자의 보직을 잠정 해임(해제)하여 선수단과 분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빙상연맹은 국회와 체육회에 선수단의 의견을 전하며 설득했다. 체육회 직원 ㄴ씨는 “당시 지도자 공석 문제를 선수들이 결정할 사안인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도자의 지도력을 문제 삼았는데, 윤 감독은 올림픽을 세 번이나 경험한 감독이었다. 빙상연맹의 입장이 합리적이지 않았다. 약간 프레임을 짜맞추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빙상연맹 사정을 잘 아는 ㄱ씨는 “선수들에게 지도자 교체 여부를 물어본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선수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뽑으려면 공개 채용을 왜 하나”라고 반문했다.

법원과 체육회는 결국 빙상연맹에 제동을 건다. 7월11일 김 코치는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 인용을 받고 재심을 거부했다. 윤 감독은 8월13일 체육회 재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빙상연맹은 김선태 이사를 ‘임시 총감독’으로 끌어넣는 작업에 착수한다.



01

초고속 선임 이후 5일 만에 퇴촌한 김선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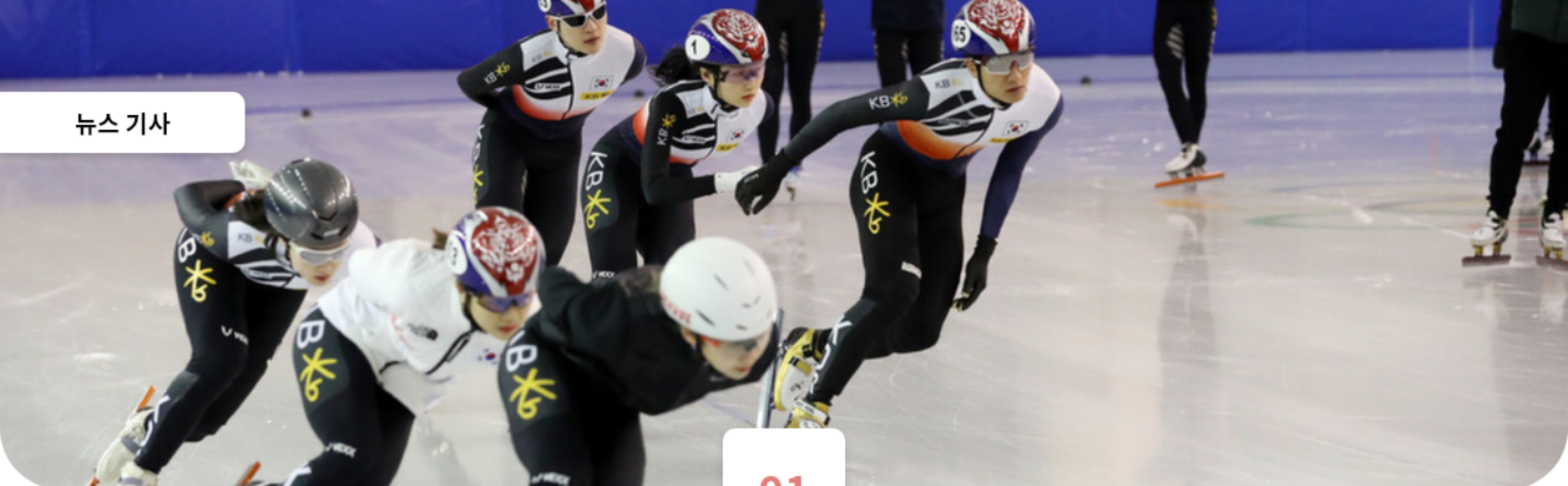
국가대표 감독은 공개 채용이 원칙이다. 빙상연맹이 두 지도자에게 징계를 내리자마자 채용 공고를 준비한 이유도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였다. 문제는 김 이사를 초고속으로 이틀 만에 새 감독으로 선임하고자 채용 공고조차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새 집행부에서 김 이사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경향위 위원이자 쇼트트랙 경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그는 국가대표·엘리트 체육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경향위는 그간 쇼트트랙 경기 TF의 의견을 받아 의사결정을 해왔는데, 쇼트트랙 경기 TF는 8월19일 위원장인 김 이사를 포함한 4명을 차기 지도자로 경향위에 추천한다. 경향위는 같은 날 13차 회의를 열어 감독직에 김 이사를 낙점하고 이사회에 올린다.

빙상연맹 이사회는 경향위 회의 다음날인 8월20일 김 이사를 새 감독으로 확정한다. 이사회에서 “빙상연맹 쪽 소통 및 업무 처리가 미흡했다. 두 지도자(윤재명, 김현곤)의 처우 논의가 필요하다”(제갈성렬 이사)는 말이 나왔지만, 묵살됐다. 경향위 위원장인 세우 전무이사는 “윤 감독에게는 보직 변경, 김 코치는 해임을 건의한다”는 입장을 냈다.

빙상연맹은 8월21일 보도자료를 내 “선수단 관리 소홀과 지도력 부재 문제로 윤 감독에게 보직 변경을, 김 코치는 불성실한 태도와 공금 부당 청구 행위 등을 고려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힌다. 또 김 이사를 놓고선 “국가대표팀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최적의 인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본 한 국가대표 출신 지도자 ㄴ씨는 “김 이사의 셀프 추천에 더해 셀프 임명”이라고 꼬집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한 빙상연맹의 전폭적인 지지로 지도자가 된 김 이사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8월 말 대표팀의 캐나다 전지훈련에 합류하는 무리한 행보를 했다. 정작 김 코치와 윤 감독은 빙상연맹이 불허해 전지훈련에 동참하지 못했다. 김 이사의 캐나다 전지훈련 비용은 전액 빙상연맹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훈련에 다녀온 김 이사는 9월1일 체육회 허락을 받아 진천선수촌에 들어갔지만, 2018 평창겨울올림픽 당시 선수 폭행 사건을 은폐하다 받은 징계 이력(자격정지 1년)이 논란이 돼 닷새 만에 퇴촌했다.



01

내부 보고 받았지만 침묵한 유승민 체육회장

빙상연맹이 이렇게 막가파식 ‘찍어내기’ 행보를 벌일 수 있었던 데는 체육회의 미온적 대처도 한몫했다. 유승민 체육회장은 ‘빙상연맹의 대처에 문제가 있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 김 코치와 직접 대화해 사정을 파악했지만,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쇼트트랙은 2026년 2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낼 사실상 유일한 종목이라, 엘리트 체육의 부흥을 꿈꾸는 유 회장이 큰 관심을 보이는 종목이었다.

유 회장은 7월29일 김 코치와 빙상연맹의 지도자 입촌 거부를 놓고 대화를 나눴다. 이미 ‘빙상연맹이 규정대로 지도자들 입촌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내부 보고를 받은 상황이었다. 김 코치는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이 난 상황을 언급한 뒤 “3년 동안 대표팀 성적이 부진한 적도 없고 사건·사고도 없었는데, 빙상연맹이 프레임을 씌워 일단 (대표팀에서) 내보내려고 한다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호소한다. 이어 “계약기간까지 임기만 보장되면 더는 시끄럽게 할 생각도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지도자 자리에) 넣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한다.

김 코치의 하소연을 들은 유 회장은 “가처분 인용이 났는데 복귀를 안 시켜준다는 것인가” “지금 선수들이 감독과 헤드 코치 없이 운동하고 있는가” “이수경 빙상연맹 회장이 이 내용을 알고 있나” 등 여러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서 “법무실을 통해 상황 파악을 명확히 체크하고 다음주 정도에 다시 보자”며 “빙상연맹의 인사 문제까지 체육회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억울함은 없어야 하니 (사안을) 잘 파악해서 다음주 정도에 연락을 주겠다”고 답한다.

하지만 이 대화를 끝으로 유 회장의 연락은 끊긴다. 빙상연맹은 8월21일 보도자료에서 ‘김 코치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체육회는 7월9일과 31일 ‘징계 효력을 정지하라’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을 뿐, 추가 조처는 하지 않았다. 김 코치는 “유승민 회장은 빙상연맹의 입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법과 질서에 따라 체육회를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빙상연맹의 위법한 절차를 묵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빙상연맹은 앞서 설명했듯 김 이사의 과거 징계 이력이 문제가 되자, 9월5일 김 이사를 감독직에서 경질하고 퇴촌 처리했다. 체육회 재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윤 감독은 복직됐지만, 김 코치에게는 어떤 조처도 하지 않았다. 선수 시절 밟지 못한 꿈의 무대 올림픽. “지도자로서 올림픽을 가는 게 평생소원”이었던 김 코치는 빙상연맹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법원 결정과 체육회 판단을 무시하는 빙상연맹의 대처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체육회의 미온적 대처는 사실상 묵인 방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졌다고 제자 폭행…중계에 잡힌 '폭력 코치'

SBS 유병민 기자

2025.09.19. 21:42

사진=SBS뉴스 보도 캡처 장면(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하성원, 영상제공 : 진종오 의원실, 출처 : SBS 뉴스)

<앵커>

고등학교 레슬링 코치가 경기에서 진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유튜브 생중계에 포착됐는데요. SBS 취재 결과 해당 코치는 평소에도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유병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월 말 열린 고등학교 레슬링대회입니다.

승부에 패한 A 선수가 매트에서 내려오자, B 코치가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관중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도 폭력을 행사하던 B 코치는, 곧이어 선수 목덜미를 잡고 경기장 밖으로 나갔는데, 이후 B 코치가 선수 목을 내리치고, 가슴에 주먹을 날리는 장면까지 유튜브 중계에 잡혔습니다.

취재 결과 B 코치는 평소에도 선수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했는데, 학생들은 B 코치가 무서워 어느 곳에도 신고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해당 학교 C 선수 : 훈련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못하면 때리고 욕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이 대회를 유튜브로 생중계하고도 사흘 전에야 사실을 확인한 대한레슬링협회는 뒤늦게 진상 조사에 들어갔고, 학교 측도 사흘 전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뒤에야 코치와 학생을 분리 조치했습니다.

최근 연이은 체육계 폭력 문제에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고, 레슬링협회도 공식 홈페이지에 폭력 행위 신고 공지를 띄워놓았지만, 현장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단 평입니다.

[진종오/국민의힘 국회의원 : 폭행에는 강, 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폭행 자체는 일단 무조건 근절되어야 하고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2차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B 코치는 해당 영상에 대해 "레슬링 기술을 설명해 준 것이 오해받을 행동으로 보였을 뿐"이라며, 제보한 학생들도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전장치 없는 '신뢰'의 그늘...시험대에 올라선 태권도장

이데일리 정현 칼럼리스트

2025-09-21 16:59

사진=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어린이 관원이 사망하게 만든 관장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출석하는 모습(뉴스1)

태권도 관장이라는 지도자의 위치는, 단순한 기술 전달자를 넘어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다.

2024년 7월 한 태권도장에서 어린이 관원 학대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 해당 지도자는 당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20분 이상 거꾸로 뒤집어 매달고, 좁은 매트 공간에 억지로 밀어 넣어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장난이었다”고 무책임하게 주장하면서, 반성없는 태도와 책임 회피를 일삼았다. 대중은 물론, 동종업의 지도자들로부터 공분을 일으켰다.

△지도자의 윤리성이 무너진 순간

이 사건은 지도자로서의 기본 윤리마저 철저히 배반한 극악무도한 범죄다. 특히 어린 생명 앞에서 보인 무감각과 잔인함, 사건 발생 직후, 증거를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한 태도는 지도자의 자격을 스스로 파괴한 행위 그 자체다.

스포츠 지도자에게 기대되는 ‘돌봄과 인내, 배려, 생명 존중’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이 사건을 통해 완전히 훼손됐다. 학부모들은 자녀를 믿고 맡겼을 뿐인데, 학대와 사망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맞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스포츠 지도자에게 갖는 사회적 신뢰를 무참히 파괴했다. 많은 태권도장이 지역 사회에서 인성교육, 체력 단련, 공동체 활동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이번 사건 하나로 인해 태권도 전체에 대한 신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2025년 4월 10일 1심에서 징역 30년과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은 “70대에 출소할 수 있다”며 현실에 대한 절망을 토로했다.

일부 국민은 형량이 가볍다고 느끼지만, 법은 감정보다 형사사법 체계의 원칙 위에서 움직인다. 다만,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을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판결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윤리적 판단과 법적 처벌의 줄다리기

이번 사건은 개별 관장의 일탈로만 봐서는 안 된다. 전국의 태권도장 전체가 ‘불신의 그늘’ 아래 놓일 위험이 있다. 많은 도장이 소수의 비인간적 범죄 때문에 이미지 타격을 입고 있다. 학부모는 아이를 태권도장에 보내는 것조차 고민하고 있다.

태권도장 운영을 포함해 지도자 및 전 태권도계는 보다 강도 높은 개선이 필요하다. 윤리 교육과 지도자 자격 시험의 강화를 필두로 현재 시행되는 지도자 선발 과정의 윤리 (재)교육의 강도 높은 검증과 의무화, 과거 지도자의 수련내용, 폭력 및 학대 이력, 상담일지 공유 등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와 같은 유사 사건이 발생 시 투명한 대응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태권도 협회 및 가맹단체 차원에서 정직한 사과와 후속 조치, 피해자 지원을 공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뢰보다 검증이라는 안전장치가 우선

이번 사건은 스포츠 지도자가 갖는 권위와 그에 따른 책임을 방기했을 때 그 결과가 개인과 집단, 조직 및 사회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하는지를 냉정하게 보여준다. 이는 단순 개인의 범죄를 넘어 스포츠 지도자의 윤리와 사회적 역할 전반에 있어 대중의 기대를 일거에 무너뜨린 상징적 사례다.

법적 처벌의 엄정함 뿐 아니라, 태권도 및 동종 학원 스포츠계의 시스템적 재발 방지의 노력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적 대응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태권도계는 사회와 대중에게 보여온 스스로의 정체성과 가치를 재정비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신뢰 회복의 자세와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피해 아동과 유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남은 이들은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고 진심 어린 반성의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행동은 지금 당장 시작돼야 한다.

무계획 무대책 무책임!
준비 없는 천안 이전
비전 없는 운영 계획
한국 축구 필장 난다!

04

"준비 없는 이전 반대"...축구협회, '천안 시대' 앞두고 뒤숭숭

News1 안영준 기자

2025.09.19 06:40

사진=축구협회 내부에 붙어있는 벽보(News1 안영준 기자)

충남 천안으로 이전을 앞둔 대한축구협회가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 광화문 시대를 접고 천안 시대를 여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지만, 이전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축구회관에 마련된 협회 사무실을 19일 천안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로 공식 이전한다.

지난 2022년 착공, 약 1800억원을 들여 완공한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는 47만8000㎡ 규모의 축구 및 스포츠 시설이다. 총 11면의 축구장, 스타디움, 실내 축구장, 숙소동은 물론 축구 역사박물관, 체육관, 생활체육시설 등을 아우르는 매머드급 시설이다.

앞으로는 남녀 연령별 대표팀 등이 이곳에 소집돼 훈련할 뿐 아니라, 축구협회의 대회 운영, 홍보, 마케팅, 회계, 교육, 연구 등 모든 업무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축구협회의 '천안시대'를 앞두고 기대감도 크다. 다만 정작 내부 분위기는 다소 어수선하다.

지난 13일부터 이사를 시작해 이미 협회 살림을 대거 천안으로 옮기기 시작했지만 대부분 생활권이 서울인 직원들을 배려한 대책은 미흡한 까닭이다.

축구협회 경영진은 데드라인을 정하고 이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도 업무 지원과 교통편 마련 등에 대한 후속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천안에 준비 중인 사무실은 아직 전체 직원이 업무를 볼 수 없는 환경이다.

무계획 무대책 무책임! 준비 없는 천안 이전 비전 없는 운영 계획 한국 축구 끝장 난다!

04

축구협회는 처음 축구센터를 설계할 때 종합센터 내 KFA 스타디움에 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 감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등에서 논란이 되자, 숙소동을 사무실로 바꿔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축구계 관계자는 '뉴스1'에 "처음 설계할 때부터 숙소로 쓰려고 했던 공간이라 사무실로 활용하기엔 전기 배선, 수도 등 애로사항이 많다. 다들 천안시대에 맞춰 의욕적으로 일하려고 마음먹고 있지만, 용도에 맞지 않는 공간에 120명이 모여 일하면 화장실과 동선 등 여러 문제가 더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통편 마련 및 이주 대책도 아직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축구협회 경영진은 우선 서울역에서 천안축구센터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는 대안을 마련했지만, 전체 직원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부서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이전 시기와 관련해서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축구협회는 10월 10일 브라질, 14일 파라과이와의 A매치 2연전을 앞두고 있다. 축구협회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일정인데, 이사까지 겹치면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

데드라인에 맞춰 축구회관 사무실을 거의 비운 터라 축구협회 직원들은 2층 대회의실을 임시 사무실로 이용하는 등 업무 파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 축구회관 내부 곳곳에는 "무계획 무대책 무책임! 준비 없는 천안 이전, 비전 없는 운영 계획 한국 축구 끝장난다"는 등의 벽보가 붙어 있다. 일부 노조 직원들은 해당 문구가 쓰인 조끼를 입고 협회에 진정성이 담보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김승희 축구협회 전무이사는 '뉴스1'에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급변한 상황인 만큼, 축구협회 측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수준에 맞는 지원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 역시 셔틀버스 외에 교통비 지급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의견이 많이 좁혀졌지만 아직 좁히지 못한 부분도 있다"면서 "직원 모두가 좋은 환경에서 천안 시대를 맞이하도록 하는 게 축구협회의 기본 방침이다. 노조 측과 지속적인 대화를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좋은 소식이 전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세웅

선문대학교
AI소프트웨어학과



정재훈

한국신체정보(주)
대표



양준선

비프로컴퍼니
APAC 본부장



김권일

한국스포츠과학원
스포츠정책연구실장



김봉준

스포츠투어
대표



박성건

(주)이엔지테크
수석연구원



박성배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경영학부 교수

“AI는 스포츠 정책의 선택 아닌 필수”...정부가 민간 자율성 돕는 환경 만들어야

한겨레 김창금 기자

2025-09-11 20:26

사진=11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한국스포츠과학원 주최 ‘AI기반 미래 스포츠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및 적용 사례’ 정책포럼.(한겨레 김창금 기자)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문체부에 ‘AI 스포츠 정책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세웅 선문대 교수(AI소프트웨어학과)는 11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한국스포츠과학원 주최 ‘AI기반 미래 스포츠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및 적용 사례’ 정책포럼에서 “AI는 스포츠 정책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정부가 AI 스포츠 경쟁력을 위한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AI의 강력한 데이터 처리 및 예측능력을 활용해 기존의 정책적 한계인 재정난, 인구 감소, 인프라 노후화를 극복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혁신적인 거버넌스와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체부 안에 ‘AI 스포츠 정책관’을 뒀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교수는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능력으로 스포츠 생태계 전반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다”며 “지역의 스포츠 시설 이용률, 인구 특성, 선호 종목 등을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시설 구축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강세 종목인 양궁이나 태권도에서 AI 기술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양궁에서 선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AI 훈련 시스템이나 태권도에서 발차기 점수 등에 대한 판정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세계적으로 표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황 교수는 중국이 e스포츠 분야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표준화를 주도하는 사례를 들었다.

AI 기술은 국내 스포츠 영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선수 경기력 데이터 분석이나 과학적인 코칭 방법 개발, 팬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와 시각 자료 등이 사례다. 하지만 AI 스포츠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다.

농업도 논

영상 뉴스

발제자

발제자

좌 장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황세웅

선문대학교
AI소프트웨어학과



정재훈

한국신체정보(주)
대표



양준선

비프로컴퍼니
APAC 본부장



김권일

한국스포츠과학원
스포츠정책연구실장



김봉준

스포츠투어
대표



박성건

(주)이전지테크
수석연구원



박성배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경영학 교수

05

양준선 비프로(Bepro)컴퍼니 본부장은 “비즈니스 성공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크다. 이런 까닭에 프로 종목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무대로, 더 나아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의 도입으로 스포츠 복지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도 있지만, 거액의 기술 사용 비용을 지불하는 계층만이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또 자원 조달이 가능한 인기 종목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선수들의 훈련 효율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비인기 종목들은 뒤처질 수 있다.

황세웅 교수는 “AI 스포츠 정책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사회적 확산과 포용적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AI 스포츠 기술 접근성을 개선하고, 비인기 종목에도 기술지원을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육 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여러분의 후원이 건강한 스포츠 사회를 만듭니다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인권과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후원: 국민은행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